

2차 경제위기와 세 가지 의문

- 왜 위기는 또 다시 전염되는가.

2011.9.27 | 김병권_새사연 부원장 | bkkim21kr@naver.com

목 차

1. 반복되는 위기의 전염과 무력한 방화벽
2. 채권자의 권리 앞에 위협받는 민주주의
3. 현존 시스템 역량의 한계
4. 결론: 한국경제의 의문은 없는가.



<http://saesayon.org>

본
문

미국 더블 딥 위기, 남유럽 국가 채무 위기, 그리고 유럽 은행 위기가 겹치면서 세계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 표현대로 ‘새로운 위험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위기 의식은 극도로 고조되어 있지만 아직 국제사회는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9월 24일 열린 G20재무장관 회의와 IMF연차총회에서도 아무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종료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결과 2008년과 비교해서는 아직은 괜찮았던 각 기관의 평가도 바뀌고 있다. 오히려 2008년보다 현재의 위기가 더욱 심각한 국면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위기는 3년 전보다 더욱 심각하다”(알리스테어 달리 전 영국 재무장관) “현재 유럽 상황이 2008년 금융위기 초기에 미국의 당시 상황보다 더 심각하다”(조지 소로스) “유럽 부채위기가 2008년 위기보다 심각한 수준이다.”(일본 재무상)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청와대가 3년 전의 ‘병커 비상대책회의’를 재개했다는 소식으로 입증된다.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되어서 8월 5일 미국 신용강등 시점까지만 해도 심각한 충격은 없을 것 같았던 세계경제가 3년 전 리먼 사태를 능가하는 위험국면으로 진입했는가. 지난 3년 동안 세계경제는 어떻게 움직였으며 각 국가들은 경제 회복과 위험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실행했기에 더 큰 충격에 빠진 것일까. 이 시점에서 세계경제 위기와 관련한 세 가지 근원적인 물음이 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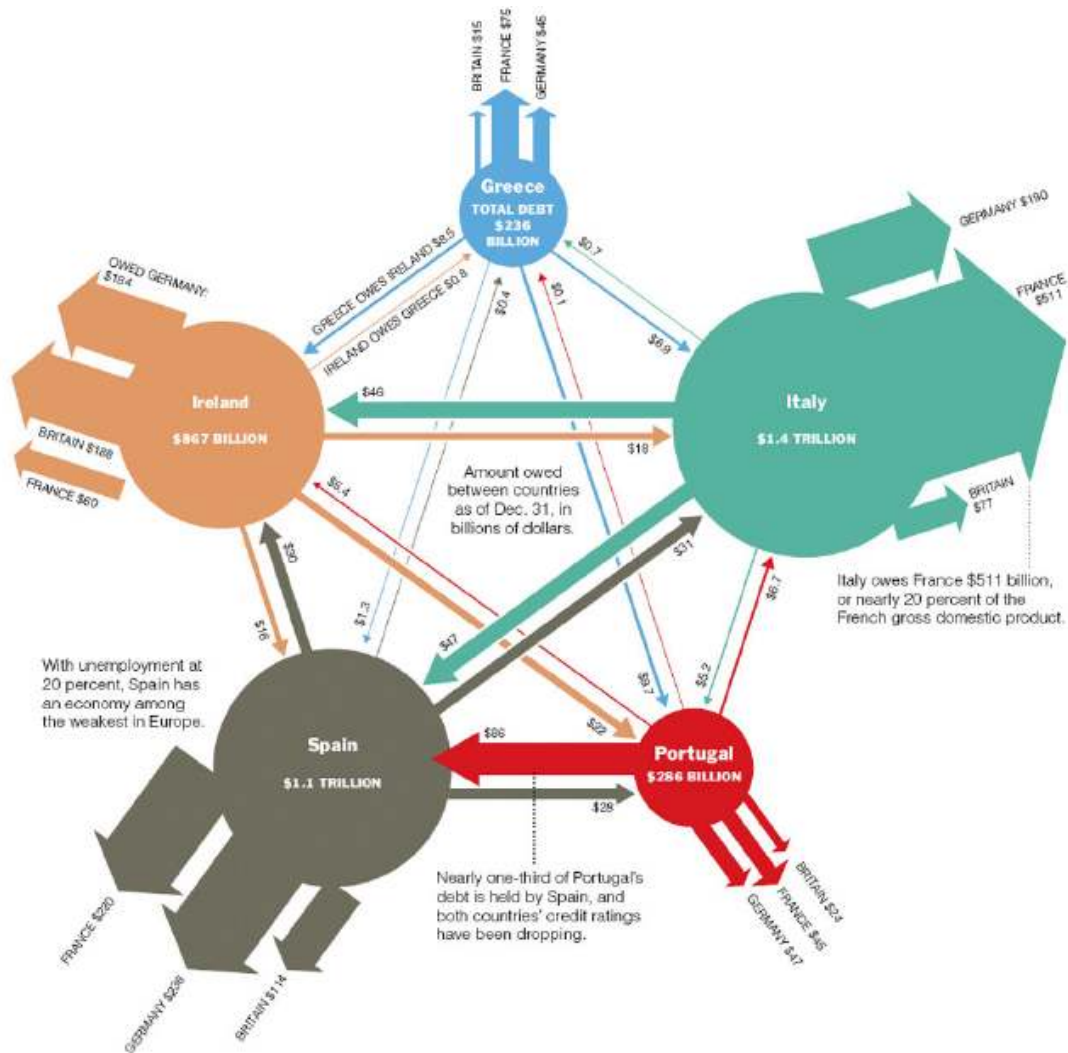
1. 반복되는 전염과 무력한 방화벽

재연되고 있는 심각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침체위기 앞에서 최근 가장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전염(contagion)과 ‘방화벽(firewall)이다.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9월 24일, 유로지역의 재정위기와 은행위기가 현재 세계경제 앞에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추가적인 전염을 막기 위해 즉시 방화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르켈 독일 총리도 25일, 그리스 재정위기가 여타 유럽 국가들로 확산되지 않도록 그리스 주변에 방화벽을 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 유로 국가들은 그리스 국가채무에 대해 부분적이든(50%부채 탕감) 전면적이든 디폴트를 기정사실화 시키면서, 더 이상 다른 남유럽 국가들이나 유럽 은행들로 전염되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을 정도로 사태는 심각한 상황

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아직도 특정 은행, 특정 국가의 위기는 그곳에 국한되지 않고 여전히 빠르게 세계경제로 전염되고 있는가. 특히 유럽 GDP의 2.5%에 불과한 그리스 디폴트 위기가 어째서 전 세계 경제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것인가. 더욱이 9월에 그리스에 지급하려던 구제금융 80억 달러 정도에 세계경제의 운명이 좌우될 상황이 되었는데. 이것이 첫 번째 의문이다.

그림 1 남유럽 5개 국가들의 채권-채무 관계(뉴욕 타임즈)



그리스 국가부도 위험의 전파력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은 지난 신자유주의 30년 동안 금융 세계화가 얼마나 세계경제 체제 안에 깊숙이 침투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은행과 은행, 은행과 국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엄청나게 큰 규모로 거밀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채무와 채권관계, 자산과 부채관계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지 3년이 지났건만 여전히 강력하게 세계경제 주체들을 서로 묶어놓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연쇄 고리의 한 지점이 부실에 빠지면 채무-채권 관계의 사슬을 따라 빠르게 위험이 전파되는 구조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그리스 부채의 80%는 국내가 아닌 해외 부채이고 그 중 절반가량은 프랑스와 독일로부터 차입한 부채다.¹⁾ 다른 남유럽 국가들도 큰 차이가 없다. 그리스 부도 - 유럽 은행 부실화 - 은행 신용 경색 - 여타 남유럽 국가 부도 전파 - 유로 지역 금융위기 - 세계 금융위기의 전염경로가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종 재발 방지책과 무수한 금융 규제안이 논의되고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위기의 전염을 차단하는 방화벽 설치 논의가 새삼스럽게 다시 급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인가. 금융회사들의 반발과 잠시 동안의 경기회복으로 제대로 된 금융규제가 실시된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판단 이외의 어떤 설명도 불가능하다.

여전히 국제적 금융 거래세는 도입되지 않았으며, 헤지펀드와 같은 투기자본 규제 대책도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다. 국채와 연동된 CDS 파생상품의 위험성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일으켰던 3대 주범들 - 위험한 투자로 고수익을 좇는 금융회사, 사실상 이들과 공범으로 확인된 신용평가회사, 그리고 이를 엄격히 감독했어야 할 금융 감독기관들 가운데 현재 크게 변한 주체는 없다. 훨씬 더 강력한 금융 규제 개혁안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결국 특정 국가들의 세금이나 외환 보유고를 동원한 구제 금융으로 위기를 일시 진정시키는 것 이상의 방화벽이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때문에 지금 다시 위기의 전염에 대한 공포와 방화벽 구축에 대한 다급한 요구가 3년 전과 한 치도 다름없이 재연되고 있는 중이다.

일찍이 금융 세계화 보다 훨씬 급격히 세계화된 인터넷 정보시스템은 다층적이고 엄격한 방화벽 시스템 덕분에 발전할 수 있었다. 각종 바이러스 방지 시스템, 친입 탐지와 인증 시스템, 접근 제한 시스템을 개발시켜왔다. 인터넷의 방화벽은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전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장치가 된 것이다. 그러나 금융시스템은 세계화되었지만 여전히 건전한 금융 거래를 위한 튼튼한 방화벽은 구축되지 않았다. 때문에 쉽게 위험이 전이되고 투기적 행위들이 세계화된 금융시스템을 교란 시켜도 대책이 없는 것이다.

1) 새사연, “유럽발 금융위기의 원인과 교훈”, 2010.5

2. 채권자의 권리 앞에 위협받는 민주주의

두 번째 의문은, 현재의 위기는 누구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미국에서 3년 전 리먼 사태가 발발하고 대규모 구제금융 방안이 왔을 때, 미국 시민들이 사적 금융회사를 구제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쓸 수 없다고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그런데 지금은 특정 국가의 국내 문제를 넘어서 국가 사이의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중이다. 그리스 국가 부도 위협 앞에서 채무자인 그리스 국민의 고통을 대가로 채권자인 유럽 은행의 부실을 막으려는 조치가 저항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IMF와 유로 국가들의 그리스 긴축 요구에 반발하고 있는 그리스 시위자들은, 그리스 부채위기가 심화되고 자신들의 소득이 감소하는 데는 국제 금융 시스템과 자국 은행들의 책임 크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 채권은행의 압박과 그리스 국민의 민주주의적 요구가 충돌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그리스의 채무상환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반면, 그리스 국민의 저항은 이기주의적인 것으로 매도당하고 있다.

채권-채무관계로 얽힌 국제사회에서 각 국가 국민의 생존과 민주적 요구는 채권자의 권리의 하위에 종속되는 것인가. 거대 채권은행 부실이 세계 경제위험을 초래한다는 구실로 채무 국가 국민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에서 채무국가의 신용을 유지시키고 세계경제 추락을 방지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가.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가경제가 파산에 이르면서 가장 먼저 IMF로부터 46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받았던 아이슬란드의 경험은 조금 다른 사례를 제공한다. 국내 총생산(GDP)의 10배가 넘는 규모로 부채로 위기에 몰린 아이슬란드 은행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구제하는 대신 과감히 파산시키고 강력한 자본통제를 실시하는 한편, 45억 유로에 달하는 영국과 네덜란드 예금(Icesave) 지급을 지난 4월 9일 국민 투표로 부결시킨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금리와 물가가 안정되고 있으며 미약하지만 경기 회복세가 시작되어 올해 2% 이상 플러스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제 금융시장에서 10억 달러의 채권을 소화했다. 심지어 OECD는 지난 6월 발표된 조사 보고서에서 아이슬란드 경제의 회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²⁾ 신용평가사의 압력과 국제 금융기관의 경고를 무시하고 아이슬란드가 채권자들에게 강경하게 대했던 점이 오히려 위기 극복 요인이 되었으며 아일랜드나 그리스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2) OECD, "OECD Economic surveys Iceland", 2011.6

까지 나오고 있다.³⁾ 올해 -5%이상 추락이 예상되는 등 끝없이 부채 악순환과 경기 침체 일로를 겪고 있는 그리스나 아일랜드와 명확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

글로벌 불균형이라는 오래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현재 세계경제는 채권국가와 채무국가로 쪼개져있는 실정이다. 미국과 중국이 대표적이다. 세계적 불균형의 축소판이 바로 유로 통화권 내의 경상수지 흑자 국가들인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와 남유럽 적자 국가들이다. 사실, 그리스나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는 본질적으로 재정위기 자체 보다는 대외 채무 상환능력에 대한 위기로 보아야 한다.

그림 2: 2010년 기준 세계 최대 채무국과 채권국 순위(10억 달러)

최대 대외 채무국 순위				최대 대외 채권국 순위			
		대외자산	대외채무			대외자산	대외채무
United States	-3,072	15,284	18,356	Japan	3,010	6,759	3,748
Spain	-1,263	1,673	2,936	China	2,193	3,892	1,699
Australia	-752	1,044	1,796	Germany	1,207	7,323	6,116
Brazil	-703	587	1,290	Saudi Arabia	882	1,084	202
Italy	-453	2,734	3,187	Switzerland	698	3,047	2,348
United Kingdom	-446	10,943	11,390	Hong Kong	691	2,723	2,032
Mexico	-355	259	613	Taiwan	626	1,015	389
Greece	-331	315	646	United Arab Emirates	585	783	198
France	-325	6,622	6,947	Singapore	492	1,376	884
Poland	-308	162	470	Norway	360	1,122	762

1 Calculated as foreign investment assets less foreign investment liabilities.
SOURC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McKinsey Global Institute analysis

특히 아이슬란드가 자국 통화를 절반가까이 평가 절하시켜 무역수지를 흑자로 반전시키고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는데 반해, 남유럽 국가들은 유로 통화를 함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정책을 구사하여 경상수지를 반전시킬 수가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실정이다. 내부 재정여력이 약화되면 될수록 남유럽 국가들은 대외채무를 끌어 쓸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유로 통화권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국가이자 핵심 채권 국가인 독일은 자국 국민들의 여론 때문에 남유럽 국가들의 지원에 소극적이고, 채권은행과 채권 국가들의 압박으로 긴축을 강행하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 또한 자국 국민의 저항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국제 사회 질서가 채권자의 권리 앞에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무력해지고 있는 것이다. 현대 사

3) "Lessons from Iceland: Coming in from the cold", The Economist 2010.12.16

회는 군사력에 의해서 뿐 아니라 국제 금융자본의 채권-채무관계에 의해서 해당 국민의 생존과 주권이 무시당하고 있는 사회로 되었다.

3. 현존 시스템 역량의 한계

세 번째 의문은 과연 현재 경제 시스템 역량으로 위기 극복이 가능한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가 든다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부터 각 국가는 한편에서는 중앙은행을 통한 금리 인하와 양적완화를 공격적으로 시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경기부양을 도모했다. 특정 국가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G20을 새롭게 구성하는 등 전례 없는 국제공조를 과시하면서 취한 조치였다.

그러나 살아날 것 같았던 실물경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효과가 사라지자 다시 침체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부실화된 금융회사는 자본을 확충하면서 살아났고 기업도 곧 이익을 회복했지만 고용과 소득이 거의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경제위기의 진정한 본질은 여기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경제 모델과 정치구조가 지속 가능한 성장세와 적절한 소득을 형성, 또는 일자리 창출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위기”⁴⁾라는 지적은 새겨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제 더 이상 내릴 여지도 없을 정도로 인하된 초저 금리는 3년을 넘어 유래 없이 장기화되고 있고 양적완화 정책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중앙은행의 이 같은 정책은 고용과 소득개선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해지고 있다. 조 순 전 총리도 “미국 연준이 3차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과 민간 부문은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⁵⁾

또한 경기부양책이 실물로 가지 않고 다시 금융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문제라면서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글로벌화 된 세계 금융시장은 서로 뒤엉켜 있기 때문에 언제나 구조적으로 잠재적인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이제는 이를 통제할 수도 되돌릴 수도 없고 조정도 불가능해졌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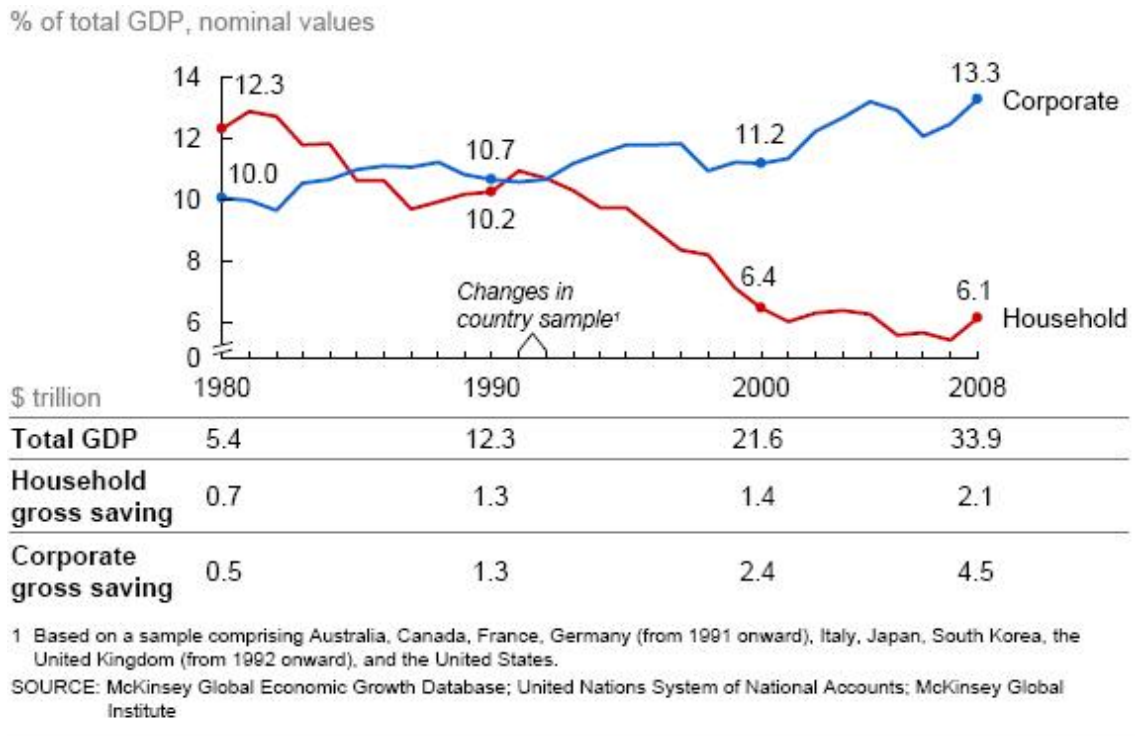
결국, 실물 생산이 아닌 금융 자체의 투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금융시스템이 아직 강력하게 경제를 지배하고 있고, 고용을 회피하면서 단기수익을 추구하려는 기업의 경영방식이 완고한 세계 경제 시스템 아래에서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어떤 정책도 국민들이 고용과 소득개선으로 연결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4) UBS 수석 경제자문역인 조지 매그너스의 주장, 머니 투데이 2011.9.13일자

5) 경향신문 2011.9.24일자

오히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은행들은 가계와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기 보다는 여유자금을 다시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있고, 기업들은 수익을 내면서도 투자나 고용에 나서기 보다는 현금을 쌓아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9월 18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미국 비 금융 기업들의 유보현금과 유동자산 규모가 2조 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해외자산을 뺀 금액이 그렇다. 이것이 현재의 시스템 역량의 실체다.

그림 3: 선진국에서의 기업과 가계 GDP대비 총저축률 변화 추이



사실 기업과 노동사이의 분배 격차의 확대, 가계 저축률의 지속적 하락과 기업 저축률의 지속적인 확대는 지난 신자유주의 30년 동안 지속되어온 문제다. 기업에 묶인 사회적 부를 국민경제로 순환시키고 노동으로 재분배시키는 대개혁이 없이 단순히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고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만으로 경제가 회복될 수는 없는 것이다. 두 번째 위기를 맞고 있는 세계 경제 현실에서 이제 보다 근본적인 개혁에 대한 진지한 모색이 필요한 이유다.

4. 결론- 한국경제의 의문은 없는가.

세계 경제를 보면서 체감하는 세 가지 의문, (1) 위기의 전염과 방화벽 부재, (2) 채권자의 권리와 국민의 민주적 의사의 충돌, (3) 시스템 역량의 한계 극복의 필요성은 한국경제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

(1) 위기의 전염과 방화벽 부재 : 한국경제는 해외에서 재발하고 있는 위기가 금융경로와 실물경로 양쪽에서 모두 전염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금융경로는 주식시장, 채권시장, 차입시장, 외환시장을 막론하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대외적 금융충격은 외환시장에서 집중적으로 표출된다. 그런데 3년 동안 금융 방화벽은 외환 선물환 포지션 한도 설정, 외화 차입에 대한 금융 분담금 설정, 채권 거래세 부활이 거의 전부이고 3100억 달러로 늘어난 보험 성격의 외환 보유고가 전부다. 그러나 최근 환율 급변동이 예시해주는 것처럼, 여전히 한국의 금융시장은 대외 충격으로부터 허약하다. 더욱 체계적인 방화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물경로로 전달되는 대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수출 시장 다변화를 넘어 특히 내수기반 확충 이외에는 답이 없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내수 비중, 특히 민간 소비 비중은 더욱 줄어들었고 수출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 결과 향후 환율 급 변동과 국제 무역의 축소는 수출동향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곧 성장률 하락으로 나타날 것이다. 장기 침체국면을 대비해 지금이라도 내수기반 확충을 위한 산업 전략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

(2) 해외 채권자의 권리와 국민의 민주적 의사의 충돌: 1997년 외환위기로 IMF와 채권자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뼈아픈 경험을 한 한국경제는 지금도 국제 금융자본의 금융시장 자유화 압력 앞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최근 추세는 국제 금융자본의 이해와 국민경제의 이익이 상충할 때 자본통제를 실시하여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합의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작년 G20 정상회의에 이어 지난 9월 22일 G20 재무장관회의 공동선언문에서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은 경제·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는 내용이 삽입됨으로 해서 자본통제는 글로벌 표준으로 공인되고 있다.⁶⁾ 이는 한미 FTA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3) 시스템 역량의 한계 극복: 지난 2010년 경제성장률이 무려 6.2%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체감경기가 거의 개선되지 않은 것은 현재 한국경제의 시스

6) 2010년 11월 G20서울 정상회의에서도 치열했던 당시 환율전쟁과 연동되어 “변동환율제하에서 환율의 고평가가 심화되고 있는 신흥국들은 신중하게 설계된 거시건전성 규제 도입을 통해 대응할 수도 있다”는 대목이 명문화되어 들어갔다.

템적인 근본 결함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 가운데서도 국민경제가 창출한 이익이 노동이 아닌 기업으로, 특히 재벌 대기업으로 심하게 편중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경제에서 노동보다 기업 분배 몫이 커지고 기업 저축이 증가하는 주로 재벌 대기업집단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재벌 개혁 요구가 확산되는 이유이며 한국경제의 향후 근본적인 체질 개혁과제다.

2011년 경제위기 조짐 상황에서 과거와 달리 특히 미국과 유럽의 정치력 부재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정치적 무능과 정쟁이 경제위기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위기가 정치적 문제로 발전된 것은 맞다. 그러나 단순히 정치적 타협과 협상력의 부족은 아니다. 기존 시스템 유지에 집착하는 막강한 국제 금융자본과 보수 세력에 맞서 과감한 개혁을 결단하고 국민의 지지아래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정치력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유층 증세 방안을 두고 공화당 일각에서 계급전쟁(class warfare)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정치적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암시해주고 있다.

